냉랭해진 청문정국…한덕수 청문회 반쪽 개의 끝 산회

민주·정의 "자료 불성실" 보이콧
박보균 후보자 청문계획서
민주 위원들 반대로 채택 불발
원희룡·박진 내달 2일 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지만 파행 끝에 산회했다. 국회는 25일 오전 10시에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진통은 여전할 전망이다.

25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냈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며 한 후보자의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들이 참석해 일단 청문회는 개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다음 퇴장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자료제출 미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불발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일정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문체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관계자는 "내일까지 하루 더 자료제출 상황을 지켜본 뒤 위원들이 모여 인사청문 계획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30분 가량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자녀 재산신고 누락 및 후보자 본인의 경력증빙 등과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토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10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에서는 제주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다.

외통위는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상정하지 않은 채 여야 간사 간 일정·자료제출 등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증인·참고인 채택,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했다. 회의를 시작하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한 차례 정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사청문특위 강병원 민주당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사면, 국민 공감대가 기준"…조국 사태엔 "송구"

청와대 출입기자단 마지막 간담회
정경심 사면 여론 보며 판단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 교수 등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각계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의 사면에 당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해당 인사들의 사면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현시점에서 이들의 사면 여부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 달 8일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판단 기준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꼽은 만큼 결국 석가탄신일 전까지는 국민의 여론을 살핀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종교계가 사면을 건의한 인물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문 대통령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구실로 12월 24일 전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고초를 겪었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빚'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범계 "김오수 사표 오늘 靑 보낼 것…고검장 사표는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표는 지금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총장과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는 여야의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소식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표를 냈다.

박 장관은 고검장 6명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는 '국회의 시간'으로 보인다"며 거리를 뒀다. 다만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단일성·동일성' 개념과 관련해선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순 있겠다"고 말했다.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제명 요구 불발

권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

25일 국민의당이 권은희(비례) 국회의원의 제명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발하며 당에 제명을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에서 제명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24일 의원총회 전에 이태규·최연숙 의원이 의사 교환을 했지만, 제명안 동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소속 의원 모두 반대해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 제명의 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지만, 또다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며 "제가 겪을 정치적 불편보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라고 했다.

또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검찰개혁법안 중재안' 입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을 겨냥해 재차 비판적 입장을 냈다.

권 의원은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 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건 경찰과 검찰이라는 권력 기관들의 리그"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